

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

-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, 이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국토공간의 공동이용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
 -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음
-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“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대책 수립 필요
 -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인적·물적 교류협력을 추진
 -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
-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
 -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**평화벨트 준비기**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 설정 착수
 -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**평화벨트 형성기**에는 평화지대를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
 -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**평화벨트 완성기**에는 평화지대를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

1. 남북접경지역의 여건과 현안과제

1) 남북접경지역의 현황

-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으며, 주요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 간의 공동개발이 용이하고, 한편으로는 생태환경의 특수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음
-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, 재해에 공동 대처,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 발굴 및 보전,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임
- 남북접경지역의 경계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남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
 - 이 지역은 민통선북방과 남방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성됨
 -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(1953. 7. 27)에 의거해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군사시설을 후퇴시킨 지역(약 907km)이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
-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(20km 정도)에 민간인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- 교통시설로는 국도 6개 노선, 지방도 6개 노선, 철도 4개 노선이 있으며 현재 국도1호선과 경의선 철도 그리고 국도7호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작업이 마무리 단계임

2) 교류협력 현안과제

- 최근 남북한간 교통망 연결, 개성공단 착공,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,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국토의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
 - 남북한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한 및 유엔사가 합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,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- 남북한 군대의 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상습적인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
-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“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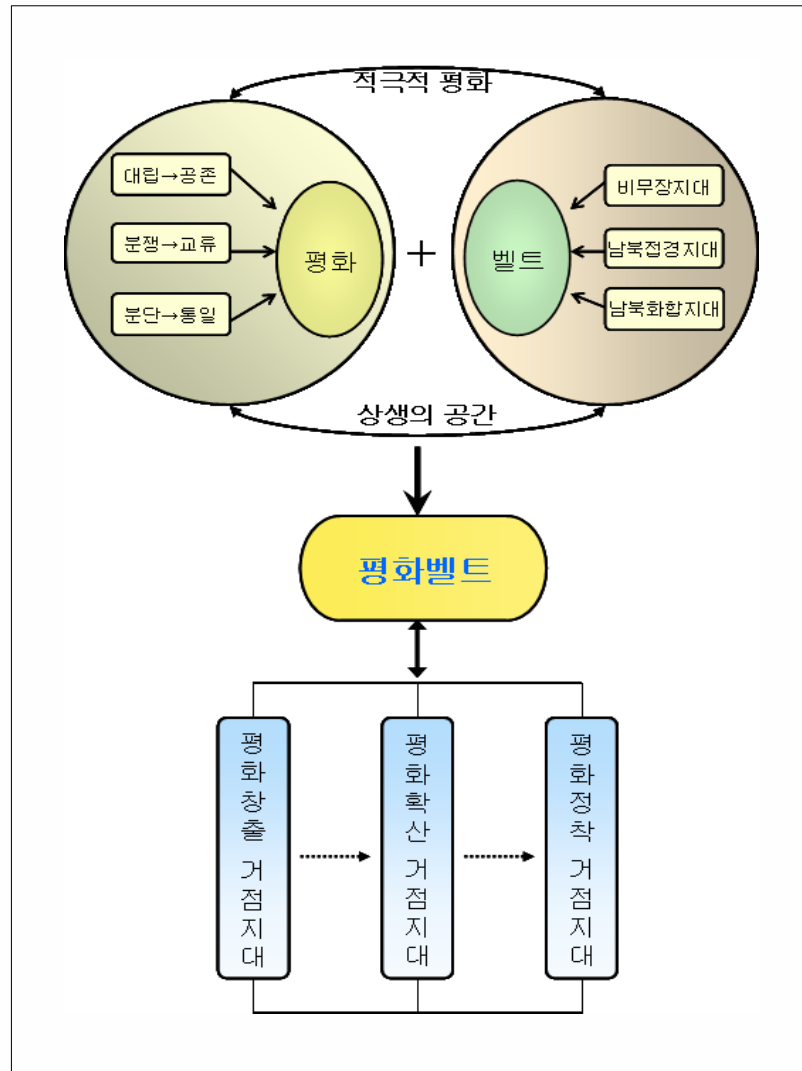
2.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 및 필요성

1) 평화벨트의 개념

- 평화벨트(Peace Belt)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공간임
 -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설치
 -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,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 지역으로서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,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임

2)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

- 인적·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구조성 필요
-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여건 조성 필요
- 정전체제에서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이용체제를 전환하여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
- 군사작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
-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대륙과의 연결을 의미하며,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평화지대를 설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이 필요



< 평화벨트 개념도 >

3.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 선정

○ 기본방향

- 남북교류협력의 중점을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에 두고 추진
-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,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 국토이용 구상
-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마련
- 접경지역내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작업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

○ 협력지구의 선정

- 기반시설여건, 경제적여건,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파주시 일원, 철원군 일원, 고성군 일원 등을 협력지구로 선정

○ 협력사업의 선정

-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,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,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·역사적 자원의 보전,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,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
- 대상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및 수자원 공동이용,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, 산업협력, 문화·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을 선정

〈 분야별 주요협력사업의 선정 〉

구 분	협 력 사 업
교통망 연결	- 철도: 경의선, 동해선, 경원선 - 도로: 국도 1, 3, 5, 7, 31, 43호선 - 연육교: 교동도-연백군, 강화군-개풍군, 김포시-판문군
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	- 임진강유역의 상습홍수 방지대책 수립 - 임남댐(금강산댐)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관리
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	-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- 북한의 접경지역 인근 산림황폐지역의 산림녹화 사업
산업협력	- 금강산-설악산 등 주요관광자원의 연계개발 - 남북공동어로 수역 지정 및 어업전진기지 설치
문화·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	- 고려유적 등 역사적 유적지 발굴 및 공동보전 방안 마련 -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시설 설치

4. 평화벨트의 추진방안

○ 추진단계의 설정

- 추진단계는 평화벨트 준비기, 평화벨트 형성기, 평화벨트 완성이 등 3단계로 구분함
 - “평화벨트 준비기”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

- “**평화벨트 형성기**”는 북한이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
- “**평화벨트 완성기**”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

○ 단계별 주요 협력사업 및 추진 방안

- “**평화벨트 준비기**”에는

- 남북교통망의 단계별 복구 및 확충
-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
-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의 추진
- 홍수 및 화재 방지 등 협력사업을 추진
-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

- “**평화벨트 형성기**”에는

-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
-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
- 산업협력 및 문화·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대책 수립
-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평화지대 확대

- “**평화벨트 완성기**”에는

-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해 서부연안 지역에 경제특구 설치
- 금강산·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
- 서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
- 국제기구 유치 등 협력사업을 추진
-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을 확대하여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완성

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위원 (ybkim@krihs.re.kr, 031-380-0151)